

# 청년 없는 청년정책 자문기구 질타...일자리 놓고 날선 공방

## 국회 행안위 광주시 국감

### 일자리 공약 달성 여부 놓고

### 이용섭 시장·야당 의원 언쟁

### 청년자문기구 청년위원 3명뿐

### 전국 평균 32% 절반도 안돼

22일 국회에서 열린 광주시청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광주시의 일자리 정책과 청년 정책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이 과정에 문재인 정부 초대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낸 이용섭 광주시장과 야당 의원들 간 '일자리 공방'도 벌어졌다.

◇'일자리' 놓고 날선 공방=국민의힘 김형동(경북 안동 예천) 의원은 이날 광주시에 대한 국감에서 "(이 시장이) 일자리 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아 일자리 문제를 진두지휘하면서 발표한 공약이 있는데 재임 기간 일자리가 늘었느냐, 줄었느냐"고 물었다.

이에 이 시장은 "재임 기간에는 늘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시각 자료까지 제시하며 이 시장을 공격했다. 김 의원은 "그래프에는 저렇게 돼 있다. (답변 내용과 다르다) 매일 점검했느냐, 점검했는데도 기억 못 하느냐"고 추궁했다.

김 의원은 "9개월간 초대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을 하고 공약 시장 선거에 출마할 때 많은 분이 일자리 부위원장을 선거 출마를 위한 스태프였다고 비판한다"고 공세를 폈다.

이 시장은 "동의하지 않는다"며 "9개월 근무했지만, 그 기간 문재인 정부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을 완성했고 정책은 오늘

만들면 나타나는 게 아니고 정책 시차가 있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시장으로서 공약한 '일자리 10만개, 고용률 68%'도 현재 고용 통계를 보면 허무맹랑하고 현재 고용 내용도 형편 없다"고 비판했다.

이 시장은 "공약은 임기를 그만 둘 때쯤 달성할 수 있으리라 본다"며 "비정규직 비율은 38.4%로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 양호한 편이지만 1인당 평균 임금은 낮는데, 거기에는 취약한 광주의 산업 기반의 영향이 있고 그 기반을 확충하는 게 제 소임"이라고 물러서지 않았다.

◇청년정책 자문기구 '유명 무실'=청년정책 수립과 연구 기구인 광주시 청년정책 자문기구에 정착 당사자인 청년(청년기본법상 19~34세) 참여는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은주(정의당) 의원은 이날 광주시청에 대한 국감에서 광주시 청년정책 자문기구의 청년위원은 3명으로 전체 의원 대비 14.3%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전국 광역자치단체 평균 32.6%를 크게 밑도는 수치고, 전북(2명·9.1%)·강원도(2명·11.1%) 다음으로 낮은 수치다. 광주시의 여성 청년위원도 2명에 불과했다.

광주시 뿐만 아니라 전남지역 대부분의 기초지자체 청년정책 자문기구의 청년 참여도 저조해 사실상 청년 당사자들의 참여와 의견 수렴이 형식적인 것에 그치고 있다. 청년위원이 한 명도 없는 기초단체의 경우 광주는 남구와 전남은 곡성·구례·보성·해남·영광·신안 등이었다.

여성청년위원이 한 명도 없는 곳도 광주시 남구를 비롯, 전남 목포·여수·곡성·구례·보성·강진·해남·영광·신안 등이었다.

이 의원은 "청년 정책이 청년에게 닿기



5년째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광주공항이 시설 사용료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용객을 위한 주차료 감면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사진은 광주공항 전경.

위해서는 정책 전달 체계가 중요하며,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라며 "지자체의 청년 기본조례가 청년기본법과 잘 호응하도록 조례 정비가 필요하고 청년 당사자의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는 청년정책 자문기구 구성원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 5년째 적자 광주공항만 시설 이용료 감면 대상서 제외 주차료 감면 제도도 시행 안해 광주 이용자들만 피해

### 조오섭 의원 공항공사 국감서 지적

### 대구·청주 등 주차료 50% 혜택

### 감면 기준 적자 여부 적용해야

5년째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광주공항이 상당수 지방공항에서 적용되는 공항 시설사용료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다른 지방 공항과 달리 공항 활성화 위한 주차료 감면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어 광주공항 이용자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오섭(광주 북구갑) 의원은 22일 한국공항공사 국정감사에서 "광주공항이 5년 동안(2016년~2020년 9월) 178억원의 적자를 내고 있는데도, 다른 지방공항과 달리 공항시설 이용 촉진을 위한 상시적인 감면과 적자 국내선 지원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광주공항의 적자는 ▲2016년 32억원 ▲2017년 27억원 ▲2018년 35억원 ▲

2019년 51억원 ▲2002년 9월 기준 33억원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한국공항공사는 착륙료, 정류, 격납고 사용료 및 조영료 등 공항 시설사용료에 대해 ▲상시적인 사용료 감면 ▲인센티브 감면 ▲적자 국내선 지원 감면 ▲공항 활성화 관련 주차료 감면 등의 감면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광주공항은 신규 취항 및 증편 운항하는 항공사에 제공하는 인센티브 감면을 제외하고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 실정이다.

최근 5년간(2016년~2020년 9월) 전국 12개 지방공항 중 상시적인 사용료 감면(인센티브 제외)에서 제외된 지방공항은 광주, 김해, 원주, 제주 등 4곳이다.

이 가운데 올해 9월 기준 적자임에도 상시적인 사용료 감면을 받지 못한 공항은 광주공항(-33억원)과 원주공항(-15억원) 뿐이다. 제주공항은 958억원, 김해공항은 111억원의 흑자를 내고 있다.

또한 광주공항의 경우 울산공항, 대구공항, 청주공항 등 각 지방공항에서 주차료 50%를 감면 운영하는 '공항 활성화 관

련 주차료 감면'도 시행하지 않고 있다.

광주공항이 감면제도에 제외된 이유는 상시적인 사용료 감면의 경우 전년도 기준 이용실적 30%이하, 적자 국내선 지원 감면은 전년도 터미널 이용률 30% 이하 공항의 연평균탑승률(1~11월) 65% 이하 국내선으로 한정하고 있는 규정 때문이다.

광주공항 여객터미널 이용률(활용률)은 2016년 54.9%, 2017년 66.2%, 2018년 67.6%, 2019년 68.9%로 계속 상승하다가 올해 9월 기준 42.0%로 감소했지만, 감면을 받기 위한 기준을 넘어섰다.

또 광주공항은 2016년 3월 대한항공 김포 노선의 운영을 포기한 상태에서 서울 이용객의 불편과 함께 추가 증편이 없는 한 이용률을 높여 흑자로 돌아서기는 한계가 있다.

조오섭 의원은 "한국공항공사는 자체 규정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제 적자이면서 감면을 받지 못하고 있는 공항은 2곳에 불과하다"며 "지방공항에 적용되는 감면제도의 기준을 실제 적자 기준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 광주 공무원 1인당 담당 주민 369명...광역지자체 중 8번째 많아

### 민주당 박재호 의원 국감 자료

### 일반직 비율 61%로 높아

### 최근 5년 210명 징계 받아

### 품위손상 156명 가장 많아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 광주 공무원 1명이 담당하는 주민 수가 많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재호(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국감 자료에 따르면 광주 공무원 정원은 3939명이며, 1인당 담당하는 주민 수는 369명이다.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 8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경기도가 904명으로 가장 많았

고 이어 경남 527명, 서울 520명, 부산 418명, 인천 416명, 대구 395명, 대전 371명 등이다. 가장 낮은 곳은 제주로 109명이다.

공무원 중 광주는 일반직 비율이 61%(특정직 39%)로 상대적으로 높다.

박 의원은 "각 지자체의 면적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지자체별 공무원 1인당 주민 수가 많다면 대민 지원 서비스의 질적 저하가 예상된다"며 "행안부는 물론 지자체는 공무원 1인당 주민 수 격차를 줄여나가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 의원은 또 "최근 5년간(2015~2019년) 광주시 공무원 210명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공직 가치를 재점검해 공직 분연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

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 광주 공무원 44명, 2016년 44명, 2017년 37명, 2018년 45명, 2019년 40명이 징계를 받았다. 이 가운데 품위손상이 156명으로 가장 많았고 감독 소홀과 공금수수 각각 6명, 직무 태만과 복무 규정 위반 각각 5명, 비밀 누설 3명, 공문서 위반 2명, 공금 유용 1명 등이다. 징계위원회 결과 중징계인 파면 2명, 해임 6명, 강등 3명, 정직 31명, 감봉 66명에 달했다.

박 의원은 "공무원은 국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책임을 가지고 직무에 헌신해야 함에도 직무를 이용한 비위 행위가 증가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공무원들의 공직기강 등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 신세계안과 의/학/상/식 특 특

# 백내장 오인하는 익상편, 원인과 치료

### ◆ 익상편이란?

익상편은 주로 안구의 내측 결막(흰자위)에서부터 각막(검은동자) 쪽으로 섬유혈관조직이 증식되어 침범, 진행하는 질환을 말합니다. 익상편은 '군날개'라고도 하며, '백태'가 낀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 ◆ 증상

흰색의 섬유혈관성 조직이 검은자를 덮기 때문에 미관상 보기 싫을 수도 있습니다. 미용상 문제가 되는 것 외에 문제는 없으나, 간혹 심한 경우 난시가 발생할 수도 있고, 진행이 많이 되어 동공(애기동자)까지 침범했을 경우에는 시력장애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피곤하고 눈이 자극받으면 충혈이 유난히 심해지기도 합니다.

### ◆ 치료

익상편으로 인해 생기는 여러 증상에 따라 증상의 호전을 위해 약물치료를 합니다. 그렇지만 약물치료로 익상편 자체를 없앨 수는 없기 때문에 각막을 많이 침범하지 않은 대개의 경우는 경과 관찰만 하면 되고, 진행이 많이 돼 동공 근처까지 침범한 경우에는 시력보호를 위해 수술로 제거하게 됩니다.

### ◆ 수술방법

익상편 수술은 국소마취로, 약 30분 정도면 끝납니다. 그러나 하루 이틀, 통증과 이물감이 있을 수 있으며 약 한 달간 간헐적인 통원치료를 해야 합니다. 수술 시기의 결정은 동공까지 익상편이 침범했을 경우에는 바로 수술을 시행하여야 하지만, 그 외의 경우에는 환자들의 생활에 얼마나 지장을 주느냐를 고려해서 결정합니다.



개원 17년간의 임상경험을 통한 정형외과 진료

## 첨단우리병원

척추, 관절 중점 치료



척추 내시경, 미세 현미경 디스크 수술 / 무릎 인공관절, 어깨 관절경 수술

다양한 치료 경험을 통해 수술의 높은 만족을 드리려 노력합니다.